

등록번호	복지전략팀-564
등록일자	2015.04.02
결재일자	2015.04.03
공개구분	공개



책임연구원	복지전략팀장	정책개발실장	대표이사	
			04/03	
오민수	성은미	황경란	박춘배	
협 조	행정팀장 이홍로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여부 및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계획

2015.04.01

복지전략팀 오민수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타당성 여부 및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계획

- | |
|---|
| <input type="checkbox"/> 발주 : 안성시 |
| <input type="checkbox"/> 연구책임 : 오민수 책임연구원 |
| <input type="checkbox"/> 내부 공동연구 : 성은미 연구위원 |
| <input type="checkbox"/> 외부 공동연구 : 김세원교수(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승희(연구보조) |
| <input type="checkbox"/> 과업기간 : 2015.4.1.~2015.7.31.(4개월) |
| <input type="checkbox"/> 연구수탁예산 : 17,100천원 |

1. 과업 개요

○ 연구의 필요성

- 복지예산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100조원 시대에 도래 했고, 향후 정부의 재정력에만 의존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부흥하면서 복지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양을 확대하는 전략과 함께 증가하는 재정적 압박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을 시도하고 있음.
-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인 사회서비스제공과 연계활동이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대부분 공적부조 외에 민간부문에 상당부분 의존하여

왔음.

- 이렇다보니 서비스 확대에 따른 민간부분의 제공기관 증가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난, 동시에 민간제공기관의 효율성 및 효과성 관리감독 등의 다차원적인 난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
-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 민간자원의 발굴 및 활용이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지만, 문제는 누가 주체가 되어 민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Collaborative Governance)를 구축하는가임.
- 한국사회 전체의 민간나눔자원을 추계한 결과, 개인기부 약 4조 4,000억원, 개인의 자원봉사 약 1조 1,500억원, 기업기부 약 2조 9,000억원으로 총 규모는 약 8조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인 8조 5,531억원에 상응하는 규모로서 민간나눔자원이 국가의 주요한 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규모에 견줄 수 있는 수준임(조주희 외, 2013).
- 즉, 지역단위에서는 서비스 확대와 부족한 정부재정의 보완적 기제 (mechanism)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출연한 지역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 내 시·군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복지재단은 시흥, 김포, 평택, 등 3개소이며 현재 가평군 등이 설립을 준비 중. 전국적으로는 20여개가 설치되어 운영.
- 지역복지재단이 민간자원의 연계 및 활용 그리고 서비스 확대 등의 역할을 위해 각 지역에서 설립되고 있지만 설치형태와 정체성에 대한 딜레마가 그간의 지역복지재단 등에서 겪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복지재단이 갖는 장점과 역할은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관리와 민간자원연계 체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상당한 의미가 존재.

- 이러한 맥락에서 안성시의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방향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선행된 사례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보완적 모델 구축이 필요함.

○ 연구목적

-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관의 서비스 자원 및 복지시설을 통합 관리하고자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타당성 및 운영방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 재단설립 및 운영방향 제안
 -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복지수요 및 설립타당성을 분석하여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역할설정 제시
 - 인력·조직 및 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구성에 관한 사항 제시
 - 복지재단의 기금 및 자원배분에 대한 장단기 계획 제안
 - 기금마련 시 타 기관(공동모금회, 민간사회복지법인)과의 관계 및 위상 정리

○ 연구 범위 및 방법

가. 공간적 범위 : 안성시 전역(1읍 11면 3동)

나. 계획기간 : '15. 4월 01일 ~ '15. 7월 31일(4개월)

다. 내용적 범위

-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여부

- 안성시에서 실행중인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타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안성시 복지자원 분석을 통한 복지재단 설립·운영방향 제시

다. 연구방법

- 비교사례분석
 - 각 시·군·구에서 출연한 지역복지재단 중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대안 모색
 - 민간자원연계에 대한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를 통한 안성시 복지재단의 역할성 모색
-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 지역 내 이해관계자(법인, 복지시설, 정책결정자, 집행자 등)의 참여의 장 마련을 통한 의견 수렴
- 안성시 내 복지자원조사(혹은 복지수요조사)
 -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복지사업 등에 관련된 복지자원조사

○ 과업지시

- 가.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의 타당성 여부
- 나. 안성시에서 실행중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현황파악 및 분석
- 다. 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분석
- 라. 안성시 복지 자원 분석을 통한 복지재단 설립·운영방향 제시
 - 재단의 주요 업무 및 역할
 - 조직 및 인력 구성 방안 마련
 - 기존 사회복지 기관과의 관계 분석(공동모금회, 민간복지기관 등)

마. 사회복지시설(위탁시설) 운영에 따른 타당성 검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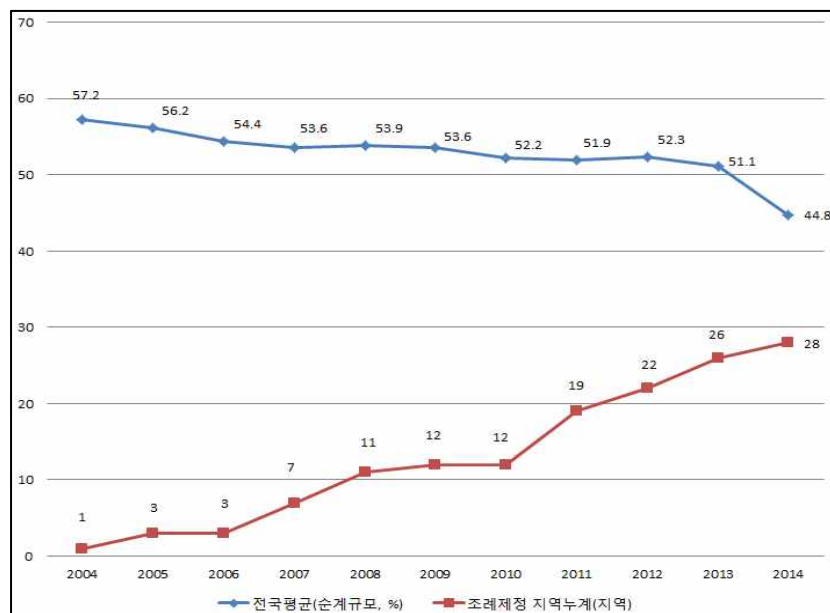
○ 연구의 주요 내용

- 한국사회 전체의 민간나눔자원을 추계한 결과, 개인기부 약 4조 4,000억원, 개인의 자원봉사 약 1조 1,500억원, 기업기부 약 2조 9,000억원으로 총 규모는 약 8조 5,000억원 상당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3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액인 8조 5,531억원에 상응하는 규모로서 민간나눔자원이 국가의 주요한 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공공재원의 규모에 견줄 수 있는 수준임을 제시하고 있다(조주희 외, 2013).
- 최근 들어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게 되면서 대안으로 모색되는 것이 지역 내 복지수요를 보충 및 보완하기 위한 민간자원(현물 및 현금) 발굴 및 연계체계에 관한 것이다. 국가와 시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들을 민간의 자발적 기부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내 활용가능한 복지자원의 총량을 늘리고 완충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 이런 민간자원 활용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레 대두되는 것이 조직 간 배열, 즉 전달체계 구성의 문제이다. 이를 민간자원연계체계라고 통칭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내 비영리법인’,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networking)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함으로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민간자원연계의 중요성에 비하여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체계적인 자원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영철, 2002 ; 류기형, 2005 ; 전홍윤, 2004 ; 장혜경 외, 2012).
- 사회복지분야 민간자원의 개념에 관하여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국가가 아닌 민간부문에서 복지적 목적으로 공급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자원을 총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조주희 외, 2013).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민간영역의 자원 가운데 기부, 후원, 자선,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는 우리사회의 전체적인 복지자원의 규모를 산정하려는 연구들에서 주로 정리되고 있다.
-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민간복지자원은 인간의 삶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인적 자원 중 민간에 의해서 충당되는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백종만 외, 2000). 미시적 차원에서는 민간복지자원을 개인, 기업, 기관들로부터 받는 자원, 조직이 서비스를 통해 직접확보하는 자원 등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김영중, 2001). 정무성 외(2007)는 민간복지자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부(개인 및 법인), 자원봉사(개인 및 기업), 기업사회공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시적 차원에서 이해해 볼 때, 민간복지자원은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자원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 사회적 위험 대비,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유·무형의 서비스와 물질적 요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로서 구체적으로는 개인, 기업 등에 의해서 제공되는 자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반면, 민간자원연계체계에 대해서는 뚜렷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원연계체계의 개념을 “기부금(품)과 자원봉사 같이 지역 내 비공식적·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기제(mechanism)”으로 정의한다. 이는 통합적인 구조적 틀(integrate framework) 속에서 민간자원의 발굴 및 배분에 관련된 모든 제도 및 절차를 체계화하여 총합적인 연계효과(aggregate linkage effects)를 관리하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활용을 위한 것이다.
- 이러한 민간자원연계체계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많이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민간자원의 총량추계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들은 이루어져 왔다(정기원 외, 2000 ; 백종만 외, 2000 ; 김영중, 2001 ; 김교성, 2007 ; 정무성 외, 2007 ; 박수지 외, 2010, 2013 ; 최균 외, 2011 ; 장혜경 외, 2012 ; 조주희 외, 2013). 하지만, 민간자원연계의 제도적 아이디어, 연계의 수단, 연계과정 등 연계체계를 둘러싼 제도설계와 ‘기구’의 설치 및 역할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또한 지역복지재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지역재단이 최근 10년간 계속하여 증가·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 오민수 외(2014)연구에서는 지역복지재단의 설립은 재정자립도와는 상관성이 없고 오히려 인접 정부의 이웃효과로 인한 원인이 더 큼을 제시한바 있다.

- 복지재단 설립이라는 정책확산의 전파속도를 누적빈도 관점에서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명확한 파동의 형태를 나타낸다.
- 지자체의 혁신적 시도라 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이 채택되는 빈도를 누적된 함수 그래프로 표현하면 S자형 곡선은 가진 선형그래프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 아래의 <그림 1>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제정의 누적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낸다.
- 그래프의 특성에서 보면 지방선거 주기와 복지재단 설립 조례 제정의 증가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03~2005년까지 3개 지역, 2007~2009년에는 10개 지역, 2011~2014년까지 15개 지역이 복지재단 설립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는 설립하였고 일부는 준비 및 추진중에 있다.
- 지방선거가 있는 주기인 2002년, 2006년, 2010년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지방정부간 정책학습과 모방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복지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압력,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이웃효과, 자치단체장의 이념, 재정적 요인 등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1] 기초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설립 조례 제정 추세(누적)

- 기초자치단체에서 20~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재정을 출연하여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추세는 지역의 재정자립도와는 별다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복지재단 설립 확산의 현상과 같이 정책확산을 다루는 많은 연구결과들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요인이 지방의 혁신적 정책을 채택하는데 재정력의 정도와 일치하는 관계가 형성되지는 않는다는 것들이 제시된바 있다.
- 조직규모가 크고 재정력이 높은 지방정부일수록 혁신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추었으므로 혁신적인 정책 채택이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최상한, 2010 ; 석호원, 2010, 조일형 외, 2012 ; 이학연, 박지영, 2012 등).
- 반면에 또 다른 관점으로 조직에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의 경우 재정력이 낮은 조직에서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배상석, 2007 ; 이정철 외, 2012 ; 정병률, 2013 등).
- 재정자립도 보다는 복지의 주요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규모에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2.2%(2013년 현재)임을 고려한다면 지역복지재단 조례가 제정된 시·군·군의 경우 이를 웃도는 지역이 상당수이다.
- 등록장애인 수는 별다른 상관성을 찾기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의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 수급자 비율이 2.2%(2012년 기준)이나 아래 해당 지역들은 이를 훨씬 웃도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1〉 지역복지재단 조례제정이 된 기초자치단체 일반 현황

지역	조례 제정연도	재정	재정 자립도	인구수	기초생보자수		장애인수		노인수	
					명	%	명	%	명	%
동작	2003	348,577	31.8	410,552	5,866	1.43	15,431	3.76	44,132	10.75
양천	2005	428,755	29.4	488,739	6,906	1.41	18,106	3.70	41,004	8.39
시흥	2005	1,173,256	46.9	394,345	5,766	1.46	16,795	4.26	26,899	6.82
평택	2007	941,885	40.1	446,385	8,771	1.96	22,059	4.94	46,145	10.34

지역	조례 제정연도	재정	재정 자립도	인구수	기초생보자수		장애인수		노인수	
					명	%	명	%	명	%
목포	2007	589,432	21.1	239,169	12,752	5.33	14,130	5.91	26,270	10.98
광양	2007	484,946	30.7	153,096	3,371	2.20	7,406	4.84	14,014	9.15
신안	2007	394,929	5.1	44,299	2,448	5.53	4,719	10.65	12,979	29.30
구로	2008	405,560	27.1	427,875	6,032	1.41	17,821	4.17	41,450	9.69
달성	2008	436,000	24.9	188,709	6,741	3.57	9,377	4.97	18,192	9.64
증평	2008	179,256	9.5	34,736		-	2,095	6.03	4,523	13.02
화성	2009	1,250,767	56.8	535,883	4,889	0.91	20,380	3.80	42,015	7.84
태백	2009	303,586	23.0	49,756	2,086	4.19	4,597	9.24	7,708	15.49
강서	2011	510,719	23.3	575,033	17,561	3.05	27,518	4.79	52,152	9.07
노원	2011	548,364	17.2	585,992	21,375	3.65	28,299	4.83	58,584	10.00
김포	2011	863,349	45.0	329,452	4,745	1.44	12,712	3.86	29,496	8.95
서산	2011	608,179	20.6	170,433	4,392	2.58	8,995	5.28	23,413	13.74
장흥	2011	305,280	5.7	41,532	2,874	6.92	4,328	10.42	11,988	28.86
거제	2011	601,556	35.9	257,669	3,705	1.44	10,585	4.11	17,710	6.87
유성	2012	343,175	30.4	324,108	4,481	1.38	10,629	3.28	18,694	5.77
청주	2012	1,268,119	32.2	841,069		-	28,498	3.39	54,728	6.51
당진	2012	586,630	27.3	166,697	2,757	1.65	9,353	5.61	23,333	14.00
강남	2013	577,244	64.3	570,331	9,372	1.64	15,641	2.74	47,041	8.25
예산	2013	405,709	10.6	86,469	3,231	3.74	6,953	8.04	19,376	22.41
여수	2013	793,966	26.4	294,060	12,233	4.16	18,483	6.29	37,830	12.86
김해	2013	1,062,553	33.8	192,749	12,419	6.44	22,651	11.75	39,588	20.54
강화	2014	353,772	11.0	67,084	3,170	4.73	5,032	7.50	16,579	24.71
담양	2014	296,627	9.7	48,196	2,587	5.37	4,041	8.38	12,052	25.01
양산		633,580	38.7	287,465	7,072	2.46	12,327	4.29	25,896	9.01
강진		282,967	6.5	40,039	2,571	6.42	3,666	9.16	11,486	28.69
가평		341,365	18.5	61,245	3,550	5.80	5,176	8.45	12,101	19.76
전국			44.8			2.2		5.0		12.2

- 따라서 시군구 출연 복지재단은 재정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내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정책확산 현상이라 볼 수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자원연계체계의 기본구조라 할 수 있는 각 지역복지재단의 제도적기반, 조직(organization), 연계과정(processes)의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을 분석하고자 한다.

(1) 제도적 기반(조례)

- 민간자원연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연계체계의 공식화를 통해 지속성과 질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체의 지방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간자원연계에 관한 제도적 기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는 ① 지방자치 조례에 의해 개별 지역단위로 민간자원연계의 공식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지, ② 지역 내 민간자원의 흐름을 단일화하여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 첫째, 민간자원연계의 공식적 체계에 대한 명문 근거가 있는지는 민간자원연계체계의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조례상의 명문화는 민간자원연계의 정책적 목적성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민간자원연계체계의 궁극적 목적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자 함이지 혹은 부족한 공공재원의 보충적 혹은 보완적 목적을 위함인지에 대한 것을 명시화하고 조직구성이 이루어진다.
- 둘째, 지역 내 민간자원의 컨트롤타워의 기능은 연계체계 내 기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짐으로 민간자원연계를 직접 수행하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자들은 유사한 동기를 가진 수많은 비영리조직들이 접근하는데 이미 피로감을 느끼고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조사된 바가 있다 (Abdy & Barclay, 2001 ; 장혜경 외, 2012)

(2) 구조적 측면

- 구조는 연계체계의 전달체계 측면으로서 지역복지재단과 주변 유관 기관 간 민간자원을 발굴하여 모금 및 배분을 하기 위한 구조로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모금에서부터 배분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발굴 및 공적자금의 보충적 지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계체계 상 구심점을 갖는 조직의 핵심적 이슈는 ① 어떤 유형의 조직인가하는 조직의 설치형태, ② 민간자원연계에 대한 지역정부와 민간비영리기관 간 파트너십 및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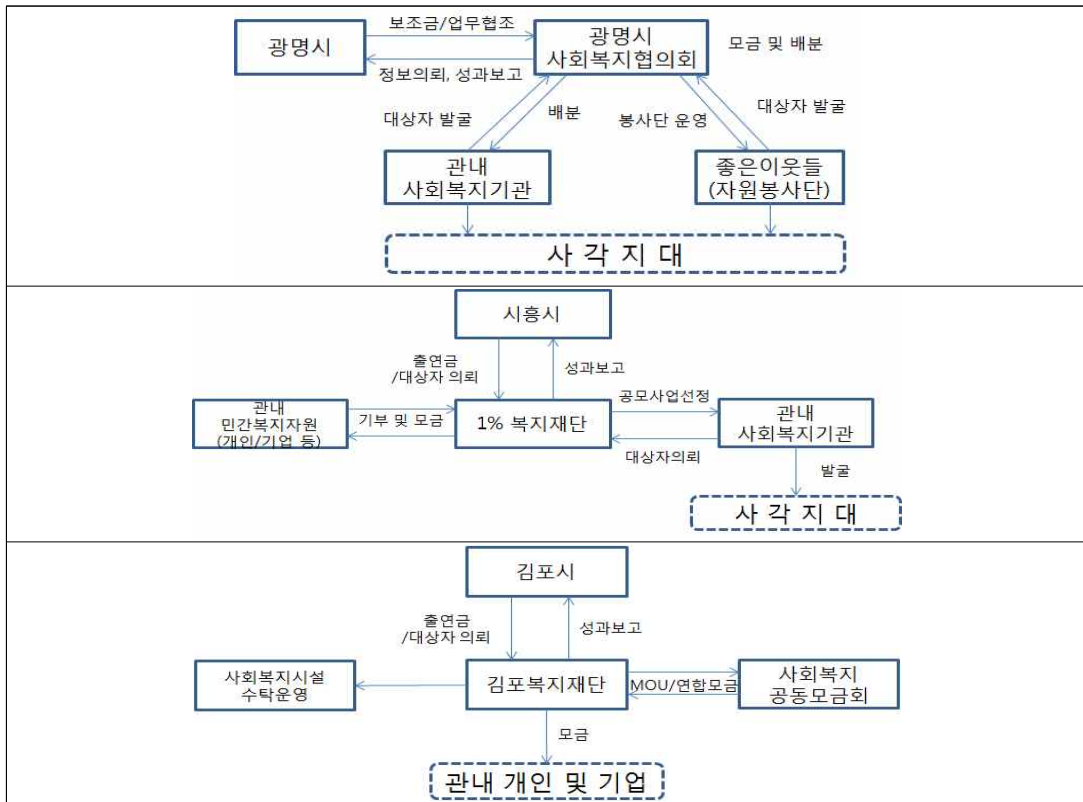
- 첫째, 민간자원의 연계체계를 운영하는 기구 즉, 조직(지역복지재단)을 어떤 형태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지 등은 민간자원연계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선행연구들도 민간자원의 총량과약을 목적을 두고 '연결매체 중심'의 접근을 할 뿐 연계체계를 운영하는 조직의 설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 왔다. 하지만 민간자원의 연계체계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구조와 기능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민간자원연계를 위한 공공과 민간 간 파트너십은 민간자원연계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한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과 자원 등과 접점에 있는 민간비영리조직들과의 협력은 자원의 발굴과 배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달체계상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간자원연계체계 구축의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다. 민간비영리조직은 지역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생산 및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의 규모 및 대상, 욕구 그리고 가용자원과 필요자원 등에 밀접한 위치에 있다. 이렇듯 공공과 민간 간 협력적 형태를 바탕으로 정책적 의도와 방향성을 유추하여 구조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원연계과정(process) : 모금 및 배분

- 지역재단이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가 민간자원의 발굴 및 연계이다. 민간자원연계의 구체적 활동의 형태는 '모금 및 배분'이다. ① 모금활동의 내용과 ② 배분을 위한 대상선정과 기준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투명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기업들이 나눔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기부자들이 민간자원연계의 제도적 환경을 이해하고 관련된 활동에 신뢰를 가지도록 공개가 필요하다.
- 첫째, 모금활동의 내용은 각 지역의 연계체계에 따라 전략과 형식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지역내 어떤 복지자원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환경적 특성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아 모금활동의 전략이 다르게 형성된다.
- 둘째, 배분의 기준은 무엇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어떤

유형의 수요자에게 모금된 자원이 전달되었고 대상선정의 기준, 모금 총액 등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열람의 자유가 시민들에게 보장되어야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자원연계체계 상 모금과 배분에 대한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경기도 내 지역복지재단 역할 사례 간단비교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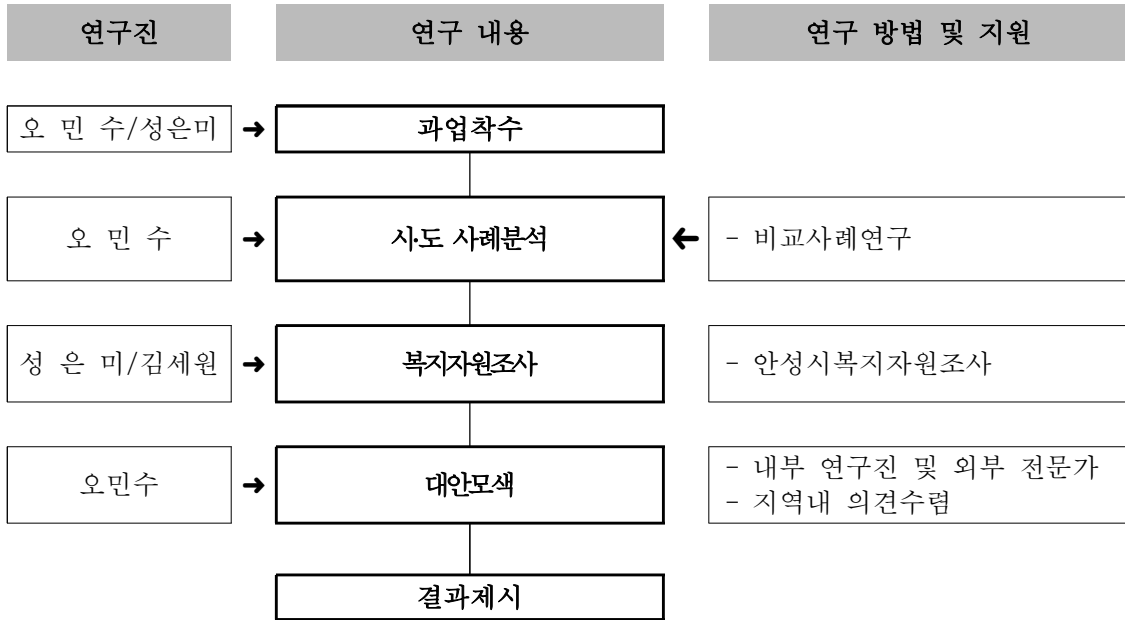
- 김웅진(1995) 비교정치연구의 분석전략과 디자인, 「비교문화연구」. 2:89-116.
- 남궁근(2001) 행정현상의 연구방법.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조주희·강철희·민인식· (2013) 민간나눔자원 총량 추계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영철(2002) “지역공동모금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02 No.4.
- 류기형(2005). “지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16.

- 전홍윤(2004). “문제해결 중심의 지원사업 운영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 장혜경·최은숙·박경수.(2012). “지역사회 비영리조직간의 민간자원조성 파트너십 형성사례 연구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 32.
- 정기원·황창순·강철희·류승표.(2000). 민간복지자원 총량과악체계 구축방안.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영종(2001).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조직들의 재정자원 수급 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 김영종.(2004). “모금회의 배분사업 체계 분석과 협력관계구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김교성·김종건·안현미·김성욱. (2007) 우리나라 사회복지 자원총량 추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4호.
- 정무성·남석훈.(2007). 민간자원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 정창화(2003) “한국 대통령비서실과 독일 연방수상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비교분석 : 교차국가연구를 통한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4권제3호.
- 박수지·박세경·이태진·김가희. (2013). 사회복지분야 민관협력 강화방안 : 2013년 민관협력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균 외(2011) 공동모금회와의 효율적인 연합모금 방안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김신·최진식(2013)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을 통한 OECD 주요 선진국과의 규제관리체계 비교연구: 미국, 영국, 독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7권 제1호(2013. 3): 55~88
- Abdy M. and Barclay J.(2001). Marketing collaborations in the voluntary sector.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3). 215-230.

- Eliot Kang, C. S. (1997). U.S. policies and greater regula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 51(2): 301-333.
- Epstein, D. & O'Halloran, S. (1996). Divided Government and the Desig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 Formal Model and Empirical Test. *Journal of Politics*. 58(2): 373-397.
- Przeworski & Teune(1970) *Logic of Comparative Social Inquiry*, New York.
- Weingast, B. R. & Moran, M. J. (1983). Bureaucratic discretion or congressional control: Regulatory policy-making by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1(5): 765-800.
- 시흥시청(www.siheung.go.kr)
- 시흥시1%복지재단(www.siheung1fund.org)
- 김포시청(www.gimpo.go.kr)
- 김포복지재단(www.bestgcf.or.kr)
- 광명시청(www.gm.go.kr)
- 광명시희망나기운동본부(www.gmcswhope.kr)

2. 과업의 추진방법

- 가. 현지 조사 : 면담, 설문조사 등
- 나. 문헌 조사 : 사례조사, 문헌연구 등
- 다. 기타 분석 : 공청회 등



3. 과업진행계획

- 과업기간 : '15. 4월 01일 ~ '15. 7월 31일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4일
- 중간보고 : '15. 5월 말
- 최종보고 : '15. 7월 말

4. 용역원가계산서

비 목	구 분	금 액(원)	구성비 (%)	비 고
인 건 비		8,739,408		
- 책 임 연 구 원		1,223,212	50.9	
- 공 동 연 구 원		2,813,825		
- 연 구 보 조 원		4,702,371		
경 비		8,250,000		
- 여 비		1,100,000	48.1	
- 유 인 물 비		1,200,000		
- 실태조사비		3,600,000		
안성시복지자원환경조사		3,000,000		
타 시군구 FGI		600,000		
- 회 의 비		1,500,000		
- 워크샵 및 설명회		850,000		
일 반 관 리 비(4.5%이내)		169,894	1.0	
이	윤(10%)			
총	계	17,159,301		
총	원 가	17,100,000	100	59,301삭

※ 작성근거 : 인건비는 경기복지재단 연구예산 편성 지침 준용.

용역비 산출 세부내역

□ 총 계 ----- 17,159,301원

□ 인 건 비 ----- 8,739,408원

○ 책임연구원(박사급) : 1인 × ₩3,058,029 × 4월 × 10% = 1,223,212원

○ 연구원(박사급) : 2인 × ₩2,344,854 × 3월 × 20% = 2,813,825원

○ 연구보조원 : 1인 × ₩1,567,457 × 3월 × 100% = 4,702,371원

※ 201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작성

□ 경 비 ----- 8,250,000원

○ 국내여비 ----- 1,100,000원

○ 책임연구원(박사급, 제1호등급) : 55,000원 × 2인 × 10일 = 1,100,000원

등 급	등 급	일 비	식 비	교통비	계
책임연구원	제1호등급	20,000	25,000	10,000	55,000
연 구 원	제2호등급	20,000	20,000	10,000	50,000
연구보조원	제2호등급	20,000	20,000	10,000	50,000

※ 작성근거 :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여비 정액표

○ 유인물비 ----- 1,200,000원

○ 중간 보고 인쇄물 : 10,000원 × 60부 = 600,000원

○ 최종 보고서(cd포함) : 10,000원 × 60부 = 600,000원

※ 인쇄물, 복사비, 최종보고서 등의 비용고려 책정

○ 회의비 ----- 1,500,000원

○ 자문회의 수당 : $100,000\text{원} \times 2\text{인} \times 5\text{회} = 1,000,000\text{원}$

○ 회의 경비 : $20,000\text{원} \times 5\text{인} \times 5\text{회} = 500,000\text{원}$

※ 참석수당 계산은 재단 기준 준용.

○ 전산처리비(실태조사비)----- 3,600,000원

○ 안성시 복지자원 및 환경 실태조사 : $3,000,000\text{원} \times 1\text{회} = 3,000,000\text{원}$

○ 타 시군 재단 인터뷰조사 : $100,000\text{원} \times 2\text{인} \times 3\text{회} = 600,000\text{원}$

○ 워크숍 및 설명회 ----- 850,000원

○ 장소임차료 : $200,000\text{원} \times 1\text{회} = 200,000\text{원}$

○ 자료제작비 : $200,000\text{원} \times 1\text{회} = 200,000\text{원}$

○ 토론자수당 : $150,000\text{원} \times 3\text{인} \times 1\text{회} = 450,000\text{원}$

※ 용역 진행과정에 공무원, 의원, 전문가, 시설 및 단체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실시에 따른 장소임차료와 토론자 수당임

□ 일반관리비 ----- 169,894원

○ (인건비 8,739,408 + 경비 8,250,000) $\times 1\% = 169,894\text{원}$

참여연구진 편성

과 제 명 : 안성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여부 및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

과제 연구량

(단위: 만원)

과제 유형	세부 유형	발주처	연구책임	연구시작	연구종료	공동 연구자수	사업 인건비	과제 연구량
수탁과제	도정 정책	안성시	오민수	2015-4-1	2015-7-31	3	200	35

개인단위 연구량

성명	소속	직급	참여 유형	개인단위연구량			담당분야	비고
				기준	조정	확정		
오민수	복지 전략팀	책임 연구원	책임	-	-	-	- 연구 총괄 - 사례분석 - 최종 집필	
성은미	경기복지 재단	대표이사	공동	-	-	-	- 복지자원조사	
김세원	가톨릭 관동대 학교	조교수	공동	-	-	-	-지역육구조사	
박승희	일용직	연구보조원	연구보조				-연구지원	

연구 목 차

I.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II. 안성시 사회복지 자원 현황 분석

1. 안성시 사회복지 자원 현황 분석
 - 기존 서비스에 대한 한계점 및 평가 분석
 - 가용자원의 실태 및 확충 필요자원의 분석
 - 안성시복지재단 전망 및 정책방향 설정, 추진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III. 타시·도, 시·군·구 복지재단 설립·운영 사례연구

1. 타시·도, 시·군·구 복지재단 설립과정 분석
2. 타시·도, 시·군·구 복지재단 우수 운영사례 조사
3. 안성시와 적합한 복지재단 사례 벤치마킹

IV. 전문가집단 FGI 실시

1. 현재 재단 업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2.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방향에 대한 제안
3. 재단설립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평가
4. 재단설립 관련 자유토론

V. 안성시복지재단 운영 및 설립 방향 수립

1. 기본원칙
 - 현재 복지관련 현황과 문제를 분석
 - 향후 복지재단의 비전과 정책방향, 부분별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안
 - 정부와 경기도 등 상위기관의 관련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연관성 확보
 - 기존 추진해 오던 사회복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2. 과업 결과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재단설립 및 운영방향 제안

-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자원의 조달 및 관리·구성에 관한 사항
 - 복지재단의 기금 및 자원배분에 대한 장단기 계획 제안
 - 기금마련시 타 기관(공동모금회, 민간사회복지법인)과의 관계 및 위상 정리
3. 평가계획 및 향후과제
- 평가의 주체, 시기, 방법, 내용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VI. 결론

